

기업간 협력을 통한 융·복합 기술개발 강화

- 중소기업 공동R&D 사업에 200억원 지원 -

- 최근의 개방형 기술혁신 추세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 ① 중소기업 공동 R&D 사업에 중소기업 단체 및 대학·연구소 등의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 ② 고부가가치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중소기업청 (청장 홍석우)은 금년도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기업간 공동 R&D 사업은 최대 2년간 연구개발비의 75%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150억원)을 중심으로,
 - 협력 환경이 우수한 기업간 공동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BI 창업기업간 기술개발 (30억원) 및 ICMS 협업기업간 기술개발 (20억원) 등 별도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함
 - * ICMS :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ervice (통합생산계약서비스)
 - 특히, 협업기술개발사업은 R&D, 제조,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간에 협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별도 공고 후 지원할 계획임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사업 개요〉

사 업	'08예산	신청대상	지원한도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50억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 협동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가능	2년, 3억원 (유망 융·복합 선도기술은 4억원 까지 지원)
BI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	30억원	BI(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 컨소시엄 * BI센터장 추천 필요	2년, 3억원
중소기업간 협업기술개발	20억원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2개이상의 중소기업	1년, 1억원

□ 금년도 중소기업 공동 R&D 사업의 주요 특징은,

- ① 그동안 기술연구회 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업종별 단체 등의 기술협력 사업 참여를 전면 허용함
 - 종래에는 사업 참여자격을 기업에만 한정하였으나, 협동조합 등 단체가 소속 기업의 공동 R&D 수요를 발굴하고 공동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업협력 형태를 기술개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② 고부가화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40개 중소기업형 선도 융·복합 기술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과제와 달리 지원규모를 4억원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월 31일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4월 7일(월)부터 1달간 온라인을 통해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힘

-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홈페이지(www.smttech.go.kr)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신청양식 등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됨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과장 오기웅 , 사무관 운영섭(042-481-4445)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보증지원

New Start 2008 Project*의 일환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특례신용보증을 4.10부터 시행

* New Start 2008 Project :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신정부의 '새로운 출발, 희망의 시작' 프로젝트 (08.3.25 청와대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특례보증은 전국의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월 10일부터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될 특례보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3개월이 경과(신청일 기준)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하게된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다만, 부동산업, 소비 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업종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용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업종 : 주점업, 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도박장, 담배주류, 골동품·귀금속, 총포, 금융, 노점, 무점포 소매업 등

②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③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 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금융기관이 15% 부분 책임 분담

④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하여 그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일정수준의 저신용 자영업자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⑤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축소하게 된다.

* 상담(재단) → 확인(금융기관) → 서류제출(재단) → 현장실사 → 약정·보증서발급(재단) → 약정·대출(금융기관)의 일반절차 중 3차례의 재단방문을 생략하여 3일의 기간을 단축 (평균 10일 → 7일)하고

-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연대보증 입보를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⑥ 보증취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2~3%p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만*여 영세소상공인들이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평균 800만원씩 보증할 경우 총 125,000개 업체에 보증 가능

중소기업청은 접수창구를 우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설치하고 수요 추이를 주시, 상반기중 62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모든 은행 및 시·군·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도 금년 2,400억원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 김종국, 담당자 유동준(042-481-4385)